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52호 (2012-33) 발행일 : 2012. 08. 17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은 낮은 편이었고, 4년간 9개서비스 영역에 걸쳐 중산층의 정책실행 체감도는 향상 되었으나 세금대비 복지수혜도에 대한 인식은 저조하게 나타남

중산층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격차 감소는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향후 지향하는 한국사회는 '중산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로서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유경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최근 미국 및 유럽발 경제위기, 물가 및 실업률 상승, 가계부채의 확대, 소득분배 및 지출구조의 악화, 중산층의 위축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급변하는 사회위험에 대비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산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함하여 복지체감 및 복지인식에 대한 진단 등이 요구됨
- 본 고에서는 '2009년¹⁾ 및 2010년²⁾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리고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³⁾ 자료를 활용하여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과 복지체감도 그리고 복지인식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1)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로 조사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그 중 본 분석대상은 6,206가구로 중위소득 272만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층 751가구(12.1%), 중산층 2,655가구(42.8%), 저소득층 2,800가구(45.1%)의 분포를 보임

2)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로 조사규모는 2,132명이며, 조사대상은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중위소득 165만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층 254명(11.9%), 중산층 951명(44.6%), 저소득층 927명(43.5%)의 분포를 보임

3)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6. 9~24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대상은 전 국민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 중위소득 150만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층 162명(19.9%), 중산층 481명(59.0%), 저소득층 172명(21.1%)의 분포를 보임

2. 중산층의 개념 및 범위 정립

- 중산층의 개념은 중간계급, 중간소득계층, 중간층의 속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계층집단으로 정의하며, 범위는 OECD, 통계청 그리고 정부와 각 정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150%’로 설정함

○ OECD(1995)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의 범위로 정의하고 50% 미만, 50~150%, 150%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분류하며,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200%로 정의함

○ 통계청에서는 중산층의 정의를 OECD와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지표(가구 중위소득의 50~150% 미만)를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각 정당에서도 동 지표를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육성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3.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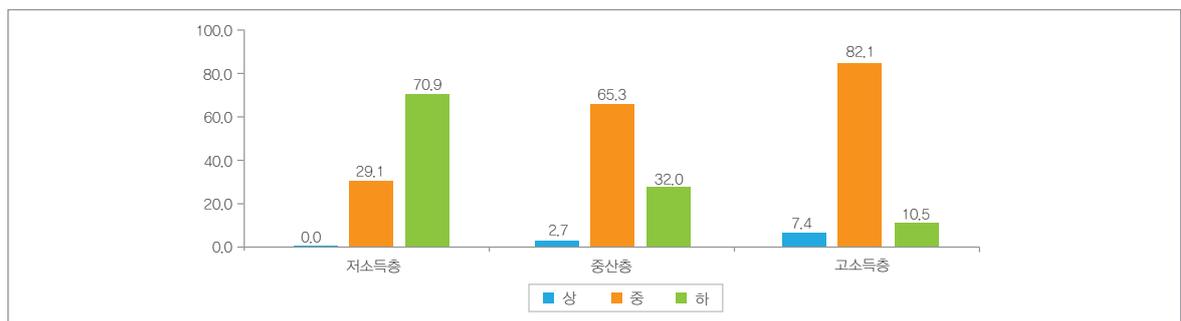
-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주관적 귀속의식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귀속의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실제 소득계층과 불일치한 현상을 보였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실제 소득계층에 비해 주관적 귀속의식이 크게 낮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3분의 1이 중산층으로 인식함

○ 중산층의 경우, 중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하층에 대한 귀속의식도 32%의 분포를 보여서 주관적 귀속의식이 낮게 나타남

- 고소득층은 중층과 하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높는데 반해, 저소득층은 하층과 중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높아서 저소득층의 주관적 귀속의식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1] 소득계층별 주관적 귀속의식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일반국민 815명임

자료: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 원자료

- 소득계층별로 주관적 귀속의식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귀속의식은 연령, 학력, 고용상태, 가구소득, 경제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됨

○ 주관적 귀속의식이 중간층인 응답자의 특성은 저연령층, 고학력소지자, 자영업자 · 고용주와 상용근로자, 그리고 중간 이상 소득층, 자가(自家) 소지자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주관적 귀속의식이 상층인 응답자의 특성은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자영업자·고용주, 중간 이상 소득층, 주택소유형태는 월세가 높아서 다소 다른 특성을 보임
- 주관적 귀속의식이 하층인 응답자의 특성은 고연령층, 저학력 소지자, 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 중간 이하 소득층, 주택소유형태는 전·월세가 높게 나타남

〈표 1〉 중산층특성별 주관적 귀속의식 (단위: %, 명)

특성	상층	중층	하층	계(수)
연령				
20~29세	2.6	76.6	20.8	100.0(77)
30~39세	0.8	65.6	33.6	100.0(128)
40~49세	3.3	62.8	33.9	100.0(121)
50~64세	2.7	57.7	39.6	100.0(111)
65세 이상	6.8	70.5	22.7	100.0(4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	43.5	50.7	100.0(69)
고등학교	1.8	59.5	38.7	100.0(168)
대학 이상	2.5	75.6	21.9	100.0(242)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5.1	61.0	33.9	100.0(118)
상용근로자	1.8	59.6	38.5	100.0(109)
일용·임시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	-	53.3	46.7	100.0(4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2	40.4	57.3	100.0(89)
100~200만원 미만	2.6	68.8	28.7	100.0(272)
200만원 이상	3.3	75.8	20.8	100.0(120)
주택소유형태				
자가	2.3	71.5	26.2	100.0(347)
전세	1.1	52.2	46.7	100.0(90)
월세·기타	9.1	43.2	47.7	10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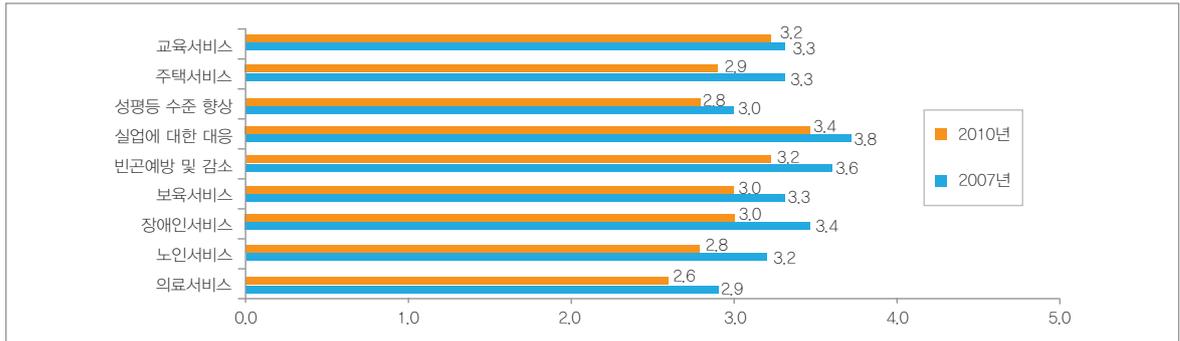
주: 1) 분석대상수는 중산층 481명임; 2)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을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눈 균등화지수 값을 적용함
 자료: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 원자료

4.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 정책실행 체감도를 9개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중산층의 정책실행 체감도는 2.6~3.4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4년 전의 체감도(2.9~3.8점)보다 높아서 모든 서비스영역에서 체감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며, 빈곤예방·감소, 실업대응 및 교육서비스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함
- 정책실행 체감도는 고소득층은 2.5~3.5점으로 중산층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저소득층은 2.3~3.1점으로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모든 소득계층에서 4년 전에 비해 정책실행 체감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은 의료서비스(2.6점), 노인서비스(2.8점), 성평등 수준 향상(2.8점) 및 주택서비스(2.9점) 영역에서 체감도가 높은 편이었고, 빈곤예방 · 감소(3.2점), 실업대응(3.4점), 학교교육(3.2점) 영역에서 체감도가 저조함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중산층과 유사하였고, 이외에 저소득층은 노인(2.5점)과 장애인(2.7점) 그리고 보육서비스(2.6점) 영역 등에서 복지체감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2] 중산층의 정책실행 체감도: 2007년과 2010년 비교 (단위: 점)



주: 1) 분석대상수는 2007년 766명, 2010년 949명임; 2) 정책실행 체감도는 9개 서비스영역에서 정부정책의 실행도를 5점 척도(매우 잘함, 잘함, 보통, 잘 못함, 매우 잘 못함)로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감도가 높음
 자료: 1)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중산층특성별로 정책실행 체감도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농촌지역거주자, 20대와 65세 이상 연령층,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자 등은 전체보다 정책체감이 높은 편이었고, 도시지역거주자, 중장년층,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소득이 높은 경우는 전체와 동일하거나 낮은 체감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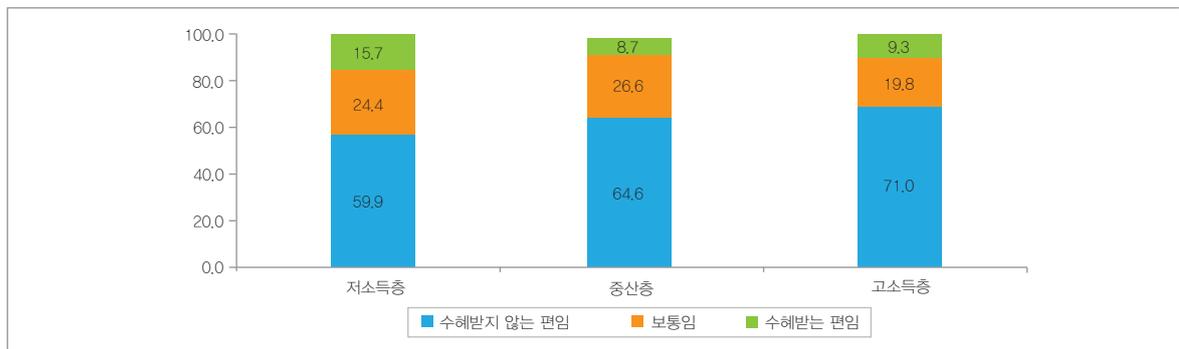
<표 2> 중산층특성별 정책실행에 대한 체감도 (단위: 점, 명)

특성	의료 서비스	노인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보육 서비스	빈곤 예방 및 감소	실업에 대한 대응	성평등 수준 향상	주택 서비스	학교 교육	(분석 대상수)
전체	2.6	2.8	3.0	3.0	3.2	3.4	2.8	2.9	3.2	(949)
거주지역										
도시	2.6	2.8	3.1	3.0	3.3	3.5	2.8	3.0	3.3	(752)
도농복합 · 농촌	2.5	2.7	2.8	2.8	3.1	3.4	2.6	2.8	3.1	(197)
연령										
20~29세	2.1	2.6	2.5	2.4	2.5	3.3	2.9	2.9	2.8	(12)
30~39세	2.7	3.0	3.3	3.3	3.4	3.5	3.1	3.1	3.5	(176)
40~49세	2.7	2.9	3.2	3.0	3.3	3.5	3.0	3.0	3.3	(258)
50~64세	2.6	2.7	2.9	2.9	3.2	3.5	2.7	2.9	3.2	(308)
65세 이상	2.3	2.6	2.8	2.8	3.0	3.2	2.5	2.7	3.0	(1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5	2.6	2.8	2.8	3.0	3.3	2.6	2.8	3.0	(309)
고등학교	2.6	2.8	3.1	3.0	3.3	3.5	2.8	3.0	3.2	(374)
대학 이상	2.6	3.0	3.2	3.2	3.4	3.5	2.9	3.0	3.4	(266)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2.5	2.8	3.0	2.9	3.2	3.4	2.8	2.9	3.2	(673)
200~300만원 미만	2.6	2.8	3.1	3.0	3.2	3.5	2.8	2.9	3.3	(276)

주: 1) 분석대상수는 중산층 949명임; 2)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균등화지수 값을 적용함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인식을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중산층은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7.4배 높아서 복지체감도가 타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저조하고 세금 부담감이 높음을 시사하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 세금대비 복지수혜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높아서 세금대비 복지체감도는 고소득층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 중산층특성별 세금대비 복지체감도는 농·어촌 지역, 고연령층, 저학력층, 소득이 낮은 층에서 높는데 반해, 도시지역, 중년층, 고학력층, 소득이 높은 층에서 복지체감도가 저조한 경향을 보임⁴⁾

[그림 3] 소득계층별 세금대비 복지수혜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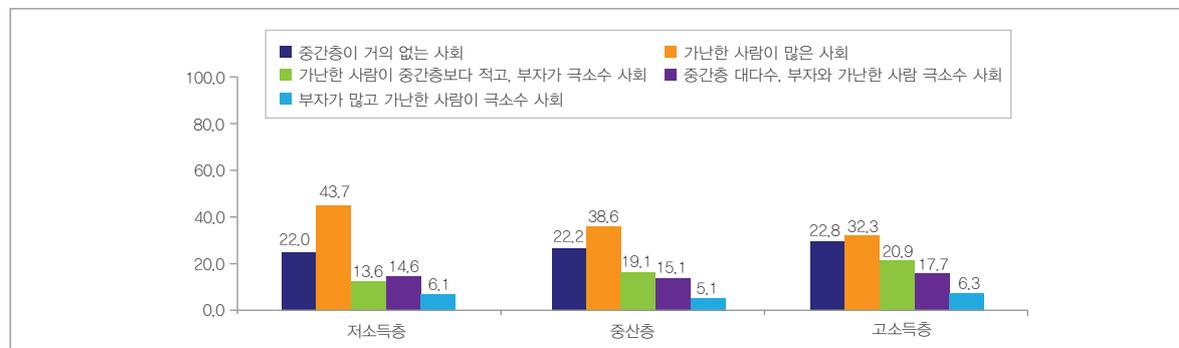


주: 분석대상수는 일반국민 815명임
 자료: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 원자료

5. 중산층의 복지인식

- 소득계층별로 한국사회의 복지인식을 살펴본 결과, 모든 소득계층별로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와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고, 미래 한국사회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향후 복지사회는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소득계층별 ‘현재 한국사회 모습’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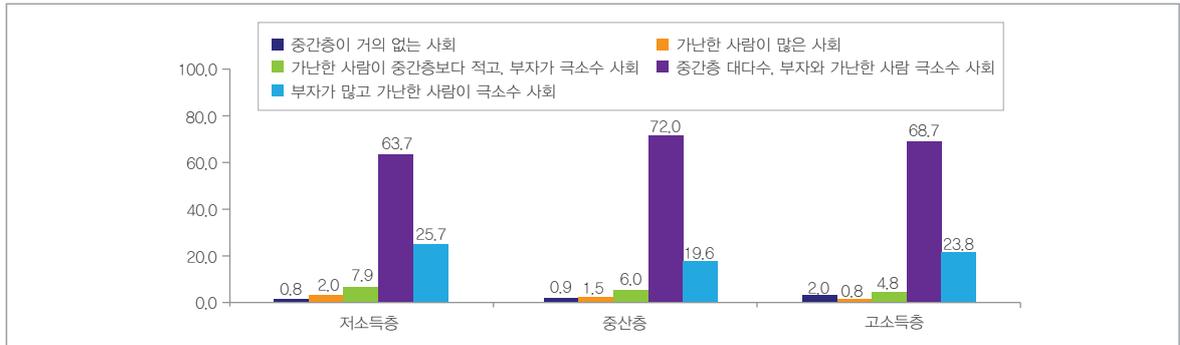
주: 분석대상수는 2,126명임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4) 김유경·정현숙·임성은·김정숙(2011), 「중산층가족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85~193 참조

○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소득계층별로 유사하나, 특히 고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라는 인식이 높은 데 비해, 저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라는 인식이 높아서 다소 차이를 보임

[그림 5] 소득계층별 ‘희망하는 미래 한국사회 모습’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2,126명임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은 모든 소득계층이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로 선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높았는데, 이는 세금부담을 늘리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목표로서 필요함을 시사함

<표 3> 소득계층별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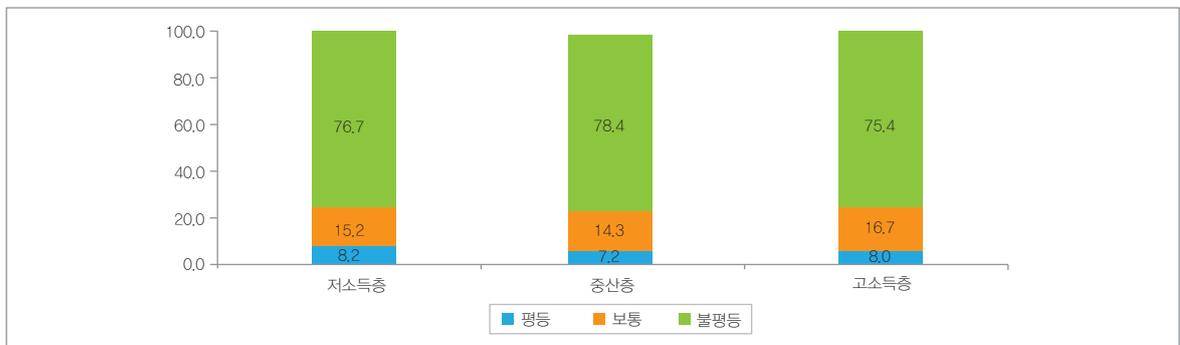
구분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	←		→	세금부담이 낮고 복지수준이 낮은 사회	계(수)	평균
저소득층	36.9	26.4	29.1	6.0	1.6	100.0(4,450)	2.1
중산층	34.9	30.5	27.9	5.1	1.7	100.0(5,816)	2.1
고소득층	37.9	35.1	22.3	3.4	1.3	100.0(1,754)	2.0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의 평등 정도에 대해 모든 소득계층이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다수 국민이 소득격차 감소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책임과제로 인식함

[그림 6] 소득계층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2,126명임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 중산층이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다음은 저소득층, 고소득층 순으로 높았으나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대다수 국민이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도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7] 소득계층별 소득격차 감소의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도

(단위: %)



주: 분석대상수는 2,126명임

자료: 201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소득격차 감소가 정부책임이라는 의식은 중산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저소득층, 고소득층 순으로 높았으나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없어서 다수의 국민이 소득격차 감소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책임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6. 시사점

-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은 낮아서 주관적인 지위가 객관적인 지위보다 낮음을 의미하며, 주관적 귀속의식은 연령, 학력, 고용상태, 가구소득, 주거 등의 경제상황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귀속의식이 저조한 현상은 사회적 양극화 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요인과 관련이 높으므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사회구성을 위해 계층 간의 격차를 좁혀 '상대적 중산층'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도모되어야 함
 - 중산층의 연령, 학력, 고용상태, 소득 및 주거 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주요 과제로 제기됨
- 중산층은 4년간 9개서비스 영역에 걸쳐 정책실행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중산층 대상의 정책이 불충분한데서 오는 결과로 생각되며, 정책실행도가 저조하게 나타난 빈곤예방·감소, 실업대응 및 교육영역에서 정책적 집중이 요구됨
 - 중산층의 복지수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은 중산층의 복지인식이 저조한 것을 의미하므로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중산층 대상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체감이 저조한 빈곤예방·감소와 실업대응 그리고 교육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중산층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격차 감소는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향후 지향하는 한국사회는 '중산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로서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
 -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에 불평등을 야기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므로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일환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향하는 복지욕구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집필자 | 김유경(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 02-380-8235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